	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	**보 도 자 료**	역동하는 정책

2017년 8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29(화) **오후 2시 이후** 보도 가능)

담당과장 (044-)	산업부	황수성 과장 (203-4210)	담당자 (044-)	최승효 사무관 (203-4215)
	환경부	금한승 과장 (201-6330)		이장원 서기관 (201-6331)
	국토부	강주엽 과장 (201-3201)		이두희 서기관 (201-3197)

산업부 · 환경부 · 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

◇ **국민 안전 최우선의 에너지 전환과 당당한 통상정책 전개**
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
②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

◇ **참여·정보공개에 기반한 환경정책으로 국민 신뢰 회복**
① 녹조·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
②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

◇ **공공 부문 [illegible]화를 통한 주거·교통비 절감**
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
②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

[핵심 정책토의 개요]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, 이하 산업부)와 환경부(장관 김은경),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는 8월29일(화) 세종컨벤션센터에서 **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「핵심정책토의」를 개최**하였음

○ **문재인 대통령, 백운규 산업부 장관, 김은경 환경부 장관, 김현미 국토부 장관**,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,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,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

○ **에너지·통상, 물 관리·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, 주거복지·교통 공공성** 등을 주제로 **핵심과제와 추진방향**에 대해 논의하였음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□ 부처별 **주요 보고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< 산업통상자원부 >

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

○ 기존의 수급안정·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(경제급전) 에너지정책방향을 국민안전·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

○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, 新비즈니스, 원전해체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②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, 포용적 성장지원 강화

○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,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

○ ASEAN·인도 등 우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[illegible]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○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新통상정책으로 전환 추진

< 환경부 >

① 녹조·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

○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을 소규모 취수원 활용, 누수 저감,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

-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 마련(연내),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하루 4만5천톤('15년 최악가뭄 당시 물부족분의 1.5배)의 생활용수 추가확보(~'21)

○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(하반기),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②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

○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,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(원스트라이크 아웃)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(10월 대책마련, '18년 입법)

○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,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·이행전략, 평가지표 수립 등에 본격착수(~'18)

< 국토교통부 >

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

○ '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%('16년 6.3%)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.5%('16년 5.4%)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

○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,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하여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 추진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②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

○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,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

○ 노후 SOC 시설 개량,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,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< 세부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>

구 분		소관 과 / 담당	연락처 (044-)
산업부	에너지 분야	에너지자원정책과 최광준 서기관	203-5121
		에너지자원정책과 엄재영 서기관	203-5122
	통상 분야	통상정책총괄과 이은희 사무관	203-5624
환경부	물 분야	물환경정책과 정의석 서기관	201-7002
	환경평가 분야	국토환경정책과 허혜인 서기관	201-7286
국토부	주거 분야	주택정책과 최병길 사무관	201-3318
		도시재생사업기획단 조민우 사무관	201-4904
	교통 분야	교통정책조정과 최정원 사무관	201-3792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[부처별 핵심 정책 주요 내용]

산업통상자원부

1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

○ 노후원전 **수명연장 금지,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** 등 **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**하는 한편 **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** 및 **산업계 지원방안**도 마련

○ 신재생에너지 ①**보급분야**, ②**주체**, ③**방식**을 전환하여 **주민 수용성과 경제성**을 확보, 발전 비중을 **'30년까지 20%로 확대**

* ①(분야) 폐기물 중심 → 태양광·풍력(진정한 청정에너지) 중심
②(주체) 외부사업자 중심 → 지자체 중심+주민참여
③(방식) 사업자 개별적 입지 → 계획입지 등 병행

- **부처간 협업**을 통해 친환경 농장, 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·BIPV (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), 학교 태양광 보급 등 **공동사업 확대**

○ **노후 석탄발전(7기) 조기폐지, 환경설비 개선**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**'30년까지 50% 감축**

- 신규 석탄발전소 **추가진입을 금지**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**청정 LNG발전소로 전환**을 적극 추진

○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, 新비즈니스, 원전해체산업 등 **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**하고 이를 통해 **양질의 일자리 7.7만개**(~22년) **창출**

* 에너지新산업(28,000명), 신재생에너지(46,000명), 원전해체(3,500명) 등

- 신재생에너지 분야 **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 구축**, IoT·AI·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**新비즈니스 창출지원**

- **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**하여('17.下) **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** 등을 가속화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2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

○ 미국의 한·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한·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·분석·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

- 미국 업계·의회·州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

- '4차 산업혁명'에 대비하여 양국간 미래지향적 산업협력(IoT·AI 가전 등)을 확대하고 한미 산업협력대화('17.下) 계기 협력성과 창출 추진

○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·지자체·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, 무역보험·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

- 아울러, 한중 산업협력단지,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분야 중심으로 한중 협력사업을 활성화

- 한중 FTA 이행위원회 개최('17.下) 등 한중 FTA 이행을 강화하고, 한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('17.下)

○ ASEAN·인도, 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

- 제조·에너지·문화·농수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연계하면서 시장별 특성에 따라 진출방식을 차별화한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

* **(ASEAN·인도)** 한-인도 CEPA 개선, 한-ASEAN FTA 추가 자유화 및 한류 연계 마케팅 강화, **(유라시아)** 에너지·플랜트·농수산 협력 강화 및 한-EAEU FTA 추진, **(중동)** 脫석유·산업 다각화 정책 연계 협력, **(중남미)** 태평양 동맹 참여 추진 등

○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, 중소기업,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新통상정책으로 전환 추진

- '22년까지 2.5만개의 내수 중소·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,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,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

- 투자유치제도 개편과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
* 「투자유치제도 통합 개편안」 및 「9대 유망서비스(컨텐츠·교육 등) 해외진출전략」 마련 ('17.下)

○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 대응역량과 대국민 소통·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 ('17.下 '新 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' 수립·추진)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환 경 부

1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

○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, 누수 저감, 재이용 등 **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·이용 체계로 전환***하여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고, **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**

* ①빗물·누수저감 → ②하수 재이용 → ③ 대체취수원 개발 → ④광역상수도 여유량

○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**충남 서부권 8개시·군**(서천·태안·홍성·청양·예산·서산·당진·보령)에 대해서는 **노후 상수도 정비, 하수처리수 재이용***, **지하수·저수지 추가개발**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여,

- '21년까지 **하루 4만5천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**함으로써, '15년 가을과 같은 **최악 가뭄 상황**(물부족량 3만톤/일)**에서도 피해 예방**

* 보령하수처리장 처리수 → 보령화력에 공업용수로 공급('19년, 일 1만톤)

○ 청주(7월, 시간당 최대강우량 92㎜)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, 행안부 등 연내 관계부처 합동 **도시침수 예방대책*** 마련

* 하수도정비·불투수면적 저감(환경부), 하천제방정비(국토부), 우수유출 저감시설(행안부) 등

○ 지역의 물 문제는 **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·이행**할 수 있도록 **유역 거버넌스를 구축**하여 물 관리의 **국민 신뢰 회복**

- 호소화된 **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**를 있는 그대로 평가·진단하기 위하여 **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**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(BOD→TOC[1])

- 하천 **수질평가지점**(상수원 위주 11개)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**지류·지천까지 확대**하고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**수질정보 공개 확대**

- 6.1일부터 개방된 **4대강 6개 보**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**추가개방 검토**(국토부 협업)

○ **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**을 위하여 수질·수량관리,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**물관리 일원화** 추진

1) BOD(생화학적 산소요구량, 생분해성 물질만 측정가능), TOC(총유기탄소량) / (정확도(유기물 측정범위) : BOD(20~40%) < TOC(90% 이상)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2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

○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,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**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 마련**(10월)('18년 입법)

- **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공개**, 이후 관련문서(검토의견서 원문 등), **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**하여 **국민 알권리 보장**과 정부부처(개발사업 승인기관·환경부)의 책임 강화

-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**거짓 작성**된 평가서는 **반려 조치 의무화**(현재는 임의규정), **현장조사**에 대한 **분야별 상세 기준** 마련(10월)

* 최근 5년간 894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례 중 거짓작성으로 반려된 평가서는 4건

-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**환경영향이 큰 기본계획 포함 검토**

○ 환경·문화재·연안·입지규제 등 **정부 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, 빅데이터의 부처간 상호 연계·공개**를 통해 사업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**[illegible]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노력**
(범정부 T/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공간 빅데이터 연계 로드맵 수립)

- **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**를 위하여 양 계획의 연동 방법·절차 협의, 조정을 위한 **공동지침 마련**('17.하 국토·환경부 공동훈령 제정)

○ 밀양 송전탑 건설,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**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*을 줄이기 위하여**,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**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 구축**

*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: 연간 82조원~246조원('13, 삼성경제연구소)

- 환경부 장관 소속의 **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**하여 사회·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**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**

-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**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**,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국토교통부

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

○ **'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,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'**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,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

- 8.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, **저렴한 임대주택 확충**과 **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**에 역량 집중

○ 공적 임대주택 **연 17만호**를 공급하고, **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**을 하기 위해 **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 개선**

- 非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**정부예산·기금 지원 확대 추진,**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**권한과 자율성 강화**

-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**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** 추진(예 : 임대주택 내 지역민이 이용가능한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)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○ 다주택자를 [illegible]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**세제·건보료 인센티브** 확대 등 **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방안** 마련

* 임대주택 등록시 임대기간(최소 4년) 및 임대료 인상제한(연 5%) 규제 적용

○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**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**을 완화하기 위해, **주임법과 상임법을 주거복지·부동산정책과 연계**하여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고,

- **뉴딜사업**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, 올해는 **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**에 시범사업* 추진

* 주민/공기업이 공동으로 "노후 주거지 재생사업"을 시행하여 복합커뮤니티 시설(마을 주차장, 어린이집 등),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

○ 쇠퇴지역 재생지원을 위한 복지·문화·환경·산업 등 **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**으로 연계하여 체감효과를 높이고 중복투자 방지

☞ 사회통합형·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**'주거복지 로드맵'**을 발표하고, 도시재생뉴딜사업도 **연내 시범사업 선정**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2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

○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**투자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**하여 국민들의 **교통비 부담을 경감**하고 **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**하는데 정책을 집중

○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금년 **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**하고, **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% 감면**

- 또한,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**서울-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**하고,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**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**를 **인하**

-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,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**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**하는 방향으로 **사업 추진 원칙**을 **정립**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○ '80~'90년대 집중 건설되어 **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**는 고령자 무임수송, 환승할인 등에 따라 적자로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

-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**중장기 계획을 수립**하고,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**안전 중심으로 투자패러다임을 개편**하기 위해 **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**

○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**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개선 연구용역**을 추진하고,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예정인 **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금년 내 마련**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

참 고 **산업부 · 환경부 · 국토부 핵심정책토의 행사 개요**

□ 행사 개요

○ **행사명** :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

○ **일 시** : 2017. 8. 29(화) 14:00~15:30

○ **장 소** :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

○ **참 석** : 총 184명(잠정)

- **청와대(58명)** : 비서실장, 정책실장, 정무수석, 경제수석 등 58명
- **여 당(10명)** : 정책위의장, 정책위수석부의장, 국토위원장, 환노위원장 등
- **정 부(116명)** : 국무총리실(6), 산업부(44), 환경부(19), 국토부(35), 원안위(2), 외교부(4), 행안부(2), 기재부(1) 및 외부인사 3명 등 116명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□ 세부일정(안)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4:00~15:30	① **개회선언 및 국민의례**(2', 14:00~14:02)	* 사회 : 산업부 기조실장
	② **모두말씀**(5', 14:02~14:07)	
	③ **핵심정책 보고**(30', 14:07~14:37)	* 각 부 장관 보고
	④ **핵심정책 토의**(45', 14:37~15:22)	* 각 부 차관 진행
	⑤ **마무리 말씀**(5', 15:22~15:27)	
	⑥ **퇴장**(15:30)	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7-08-29 13:57:29